

조선대 로스쿨 탈락설 '충격'

호남권 전남대·전북대·원광대 3곳 선정될 듯

정부가 3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선대가 탈락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전남이 충격에 빠졌다. <관련기사 3면>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29일 광주권 로스쿨 설치 대학으로 전남대와 전북대, 원광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하는 등 전국 25개 예비대학을 잠정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서울권역에서는 15곳, 광주권을 비롯, 4개 지방 권역에서는 10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가 배제된 로스쿨 예비대학 잠정확정안에 대해 광주지역은 발칵 뒤집혔다. 광주시민들과 각계 인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광주·

전남과 전북을 분열시키는 처사" "노무현 정부의 이성을 잃은 판단으로 광주·전남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성토했다.
지역민들은 정부가 로스쿨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배분 비율을 점차 줄여갈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정부는 당초 로스쿨의 수도권과 지방의 정원 배분 비율을 4대 6으로 했다가 52%대 48%로, 또 다시 57%대 43%로 조정하면서 지방 정원을 계속 줄여왔다.
또 이들은 "광주·전남과 전북간의 인구·경제력·법조 수요 등 모든 것을 무시한 엉터리 결정으로 '노무현 정권의 배신'이다"고 성토했다. 인구면(2006년말 기준)에서 광주시는 141만5천명, 전남 195만4천명으로, 전북

188만1천명에 비해 광주·전남의 인구가 두배 가까이 많다.
로스쿨이 법조인력의 유일한 산실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법조계 인적네트워크의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광주고법과 광주고검으로 인해 전북·제주를 총괄하는 호남·제주지역의 법조 중심이라는 광주의 상징적 의미도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선대가 탈락한 안이 보고된 것은 사실이나 탈락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원이 조정되면 1~2개 대학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선정에는 전국에서 41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오는 31일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될 예정이다. /임동욱·정성필기자 tuim@kwangju.co.kr

여수 화양지구 관광단지 착공

에버랜드 면적 7배

에버랜드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여수화양지구 해양관광복합단지가 29일 착공식과 함께 본격 개발된다.

▶ 사진 3면

통일그룹 계열사 일상해양산업(주)은 화양면과 화정면 일대 9.99km에 1조5천31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5년까지 세계적 종합해양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관광복합단지에는 골프장과 호텔, 별장형 콘도, 펜션 및 축구장 등이 들어선다. 또 마린스포츠펀터 및 터널수족관, 생태관찰관, 세계민속촌, 로마식 운전탕 등도 들어선다.
특히 화양면 해안과 봉화산 정상을 연결하는 케이블 카를 설치, 관광객들에게 다도해의 절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양지구 해양단지는 생산유발 2조4천억원과 소득유발 4천800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원 등 총 3조8천800억원의 경제개발 효과에, 고용창출 효과도 2만6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통일교 문선영 총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황선조 일상해양산업 회장, 김성근·주승용 국회의원,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채희중기자 chae@

완도 노화도~보길도 연결 '보길대교' 개통



완도 노화도와 보길도를 연결하는 '보길대교'가 29일 개통돼 고산 운선도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과 도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됐다. 금강기업이 시공한 보길 대교는 교량 길이 620m와 접속도로 1.4km로 사업비 539억원이 투입돼 8년여 공사 끝에 준공됐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F1·낙후지역 특별법, 과기원법 통과 난망

광주·전남 정치권 뭉하나

특단 대책 필요

F1 특별법(포클러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낙후지역 특별법(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 촉진 특별법), 광주과기원법(광주과기원법 개정 법률안) 등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여·야 합의처리 법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광주·전남 현안사업의 장기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번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광주·전남 현안사업 관련법들이 처리되지 않고는다면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는 18대 국회에서는 더욱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전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대통합민주신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신당과 한나라당은 최근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 2012년 수세계박람회지원법 등 39개 법안은

일안 합의처리하기로 한 반면 낙후지역 특별법 등 8개 법안은 유사법안과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또, F1 특별법과 광주과기원법 등 10개 법안은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여·야간의 조정 및 타협 과정을 거쳐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서남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가 기본적인 SOC를 건설하고 민자 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의 낙후지역 특별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낙후지역개발촉진 특별법안'과 병합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법안의 무늬는 같지만 근본적 성격이 다른 두 법안이 병합처리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존의 낙후지역 특별법을 근거로 제시된 참여정부의 서남권 개발계획은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쟁점법안으로 분류되면서 여·

야간 합의가 필요한 F1 특별법과 광주과기원법도 한나라당이 '세계역사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경주 특별법)'과 연계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광주·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3대 법안은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신당·한나라 총선 선거구 기준 일치

전남 2석 줄고 광주 1석 늘듯

제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주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추천 진술안이 동일한 기준인 10만1천~30만4천명의 인구

상하한선 도입을 주장,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전남에서는 영광·함평과 강진·완도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로 조정이 불가피한 반면 광주에서는 광산구의 선거구는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산술적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개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된다.

28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추천을 받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와 한나라당 추천을 받은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 비율을 3:1로 하고 상하 50% 편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18대 총선에서의 인구 상하한선 기준은 10만1천376명~30만4천128명이 되며 전국적으로 8~9개의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민주당 측 진술인인 박석순 수석 전문위원은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천~30만19천명으로 조정, 현행 243개의 지역구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요주 세무사 개업인사
2008년 1월 30일(수) 12:00 (12-225-4907)
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3가 11-6 영익빌딩 5층

한국 핸드볼 일본 대과 베이징 올림픽 직행 ▶ 22면

세계적인 자동차사들의 Best Partner!
Global Best Practice Awards 2008 Winner
POSCO